



전주매일



새만금 청년 유입, 고용·정주 통합해야

전북연구원, "첨단산업 유치 성패, 청년 생활 여건에 달려" 유입→체류→정착 전 과정 설계 위한 3대 통합 전략 제안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 등이 예정된 새만금 지역이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청년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반드시 청년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산업과 고용·정주 환경이 결합된 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북은 주택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조성 면적 전국 3위 수준으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 45%를 밑돌고 있다.

또한 문화·의료·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진은 청년 유입부터 체류, 장기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고려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코리빙(Co-living) 공간과 공공임대주택, 직주 근접형 주거단지, 생활SOC 연계형 주거복합 구역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초기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과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 등 기존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역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철도 및 환승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통근과 통학은 물론 의료·문화·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활권을 통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연구진은 "같은 대규모 투자라 하더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환경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증 분석 결과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연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 집적도 자체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 및 정주 환경 관련 지표가 청년인구 유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새만금 신산업 투자는 전북 청년인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첨단산업 유치만으로는 청년들의 정착을 보장할 수



'감자 캐기, 내 손으로 직접'

2026 농촌진흥청 가족 감자 수확 체험이 열린 17일 원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시포에서 농촌진흥청 직원과 가족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이동하며 생활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조성해야 한다"며 "청년 주거단지와 광역

교통망 인력 양성 및 정주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새만금 투자 효과가 전북의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올 추경 전북도 10조4268억 전북교육청은 4조7056억원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 마무리 전북자치도 추경 원안 가결 교육청 추경은 124억원 삭감 19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7일 회의를 열고, 10조4,268억원 규모의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7,056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긴급 민생 대응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육 현안 사업비 등을 반영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2,734억원(국비 2,430, 도비 304) 등을 반영하여 총 10조4,26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대비 2,619억원 증액된 총 4조7,056억원 규모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7억5,72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2건, 124억원을 감액했다.

김명지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의 사업성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해양무인이동체 실증 본격

새만금청, 해상시험장 내 부이 설치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실시계획 승인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새만금 호 내 해양무인이동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시험장 내 부이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214억원(해수부 150억, 전북도·군산시 50억, 민간 14억)이 투입되며, 새만금 해역에서 각종 계측·항행 안전용 부이를 설치하고 해상 실증시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바다를 누비는 드론인 해양무인이동체는 자율운항, 원격제어, 해양관측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해양산업의 핵심 분야로, 최근 해양안전, 국방, 물류,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새만금 해역은 넓은 수역과 우수한 접근성,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양 신기술 실증에 적합한



새만금 해양무인이동체 실증. (사진=새만금개발청 제공)

입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허가를 통해 관련 연구와 산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승인은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며, "새만금을 첨단 해양산업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캠페인